

세수 부족의 늪 '탈출'... '세외수입'으로 공간 채우는 인천시

전국이 세수 부족의 늪에 빠진 가운데, 인천시는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을까.

올해 시는 '세외수입'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원 중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뺀 게 세외수입이다. 과태료·공유재산 임대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제1회 추경예산 재원을 세외수입 1927억 원과 보통교부세 926억 원 등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마련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인천시가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2024년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를 일반 97.7%, 기타특별회계 83.2%로 잡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대비 0.2%p 높은 수치다.

올해 5월 말 기준 시는 목표액 7778억 원 가운데 5006억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81.8%로 나타났다.

단순히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5대 전략과제도 세웠다. ▲맞춤형 실무편람 제작 ▲위

5월 말 5006억 징수, 징수율은 81.8% 세외수입 맞춤형 실무편람 제작·발간 과목별 업무 추진 징수 절차 등 수록 세목 관리 강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도 시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 지속할 것"

임세목 징수를 제고 위한 인센티브 부여 ▲세외수입 중점관리대상 세목 체계화 ▲징수대책 보고회 강화 ▲세입관리부서 직무성과 평가가·감점제 도입이다.

먼저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은 올해 첫발을 뒀다. 그동안 실무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업무해설집을 참고해 왔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세외수입이 부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인천의 경우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바다갈래 채취 부담금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해설집만으로는 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2일 인천시는 세외수입 사업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인천시 제공

이에 시는 맞춤형 실무편람을 마련하게 됐다. 과목별 업무 내용과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다뤘고, 이달 발간·배포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인사발령으로 업무 연속성 유

지도 그간 어려웠는데, 실무편람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컨설팅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 개선방안은 실무편람에 수록해 연례적으로 증보판을 제작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여기에 시는 군·구에 위임한 세목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도점검과 인센티브 부여 카드를 꺼냈다.

세외수입 분야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원 규모다. 이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징수율을 제고한 군·구에 인센티브를 차등 분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보고체계도 한층 체계적으로 바뀐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 위주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가 진행됐다. 문서에 쓰인 숫자 중심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추진실적이 주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과제를 추진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세외수입 업무가 고도화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취준에 직장생활까지 현실이 고달픈 인천 청년들의 삶

시, 수도권 청년들 중 졸업률 '최하' 32.5%가 취업 대신 은둔생활 택해 직장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도 높아

인천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다. 대학 졸업부터 취업-직장생활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 수도권 청년의 삶'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만 15~39세 사이 청년들의 취업-직장 스트레스가 서울·경기에 비해 높다.

2022년 기준 15~39세 사이 인천 청년은 93만 6000명이며, 다양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각 주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인천 청년들은 대학교 졸업률부터 서울·경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사는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년

제 대학 졸업률은 61.8%를 기록했다.

이는 졸업률 81.9%를 기록한 서울 청년들에 비해 20.1%p 낮은 것이다. 73.2%를 기록한 경기 청년들에 비해서도 11.4%p 낮은 수치다.

장기간 은둔생활하는 청년들도 인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사는 19~34세 청년들 중 학교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채 1~3년간 은둔생활만 한 비율은 40.9%에 달했다. 경기와 서울은 38.9%·24.9%로 각각 뒤를 이었다.

5년 이상 은둔생활을 한 청년 비율도 인천이 10.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는 6.2%, 서울은 5.1%를 기록했다.

은둔 생활의 원인으로는 취업이 1위로 꼽혔다. 32.5%의 인천 청년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은둔생활을 택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29.6%)과 임신·출산(12%), 장애로 인한 몸 불편(3.2%) 등이 차례로 꼽혔다.

청년 경제활동인구 역시 인천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15~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천의 청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65.4%다. 67.6%를 기록한 서울보다 2.2%p 낮았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인천 청년들의 일상은 행복하지 않았다. 15~39세 수도권 청년들 중 인천의 자살을 포함한 사망률이 32.5%로 경기(25.4%)·서울(24.9%)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주된 자살 충동 이유가 직장 문제였다.

질환·우울감·장애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인 서울·경기와 확연히 다른 결과다.

한편 인천의 청년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청년 나이를 15~39세로 정해 조사한 결과 2018년 100만 1000명을 기록한 인천 청년 수는 2022년 6만 5000명 감소했다.

박지현 기자

동인천역 재정비구역 해제 '제물포르네상스' 첫 발

시, 내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예정 공영개발 방식 추진... 주민의견 수렴

민선 8기 인천시의 역점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가 드디어 첫 발을 뒀다.

시는 25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을 공고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강조해오던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동인천역 주변은 지난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시개발을 위해 앞서 지정된 재정비 촉진계획을 해제하게 됐다.

시는 다음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내년 초 전면 개발에 돌입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이 하부 지하상가 사용하가 기간과 맞물린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시는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기 때문에 하부 지하상가에 따른 민자역사 철거와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자역사 철거를 제한하면 신속한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주민과의 소통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의회는 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안 심의에서 주민설명회 참여 인원이 적었던 점을 들어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추진 난항이 예상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을 공영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추후 주민설명회를 열고, 소통 창구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유정희 기자

경기아트센터 아트플러스

회원제 사전모집

내 삶에 예술을 더하다,
ART PLUS

문화의 새로운 차원, 아트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사전모집 신청서